

현안^과 과제

국민행복 1년전에 비해 상승

- 2014년 최우선 정책 과제는 '일자리 창출'



< 요약 >

■ 국민행복 계속해서 증가

○ ‘행복하다’는 긍정적 답변이 1년 전에 비해 5%p 증가

- ‘행복하다’는 답변이 45.4%로서 1년 전(2012년 9월말)의 40.5%에 비해 5%p 가량 증가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
- 2013년 12월 현재 가장 행복한 집단은 ‘대졸, 30대, 여성, 충청지역, 공무원’
- 1년 전에 비해 행복감이 ‘좋아졌다’는 응답은 ‘20~40대 젊은 층, 여성, 충청지역, 공무원’에서 많아, ‘행복하다’는 집단과 대부분 일치
- 행복감 제고를 위해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‘일자리 창출’, ‘교육비 부담 완화’, ‘민생치안 강화’, ‘주택시장 안정’ 등이었음
- 1년 전 대선의 가장 큰 이슈였던 ‘복지’와 ‘경제민주화’는 가장 후순위로 밀려났음

■ 정책 지지도는 안전>노후>주택 정책의 순으로 높아

○ ‘범죄예방 및 안전 정책’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았으며, 다음으로는 ‘노후 지원 정책’, ‘주택시장 대책’ 등의 순이었음

- 7가지 걱정거리 관련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물어본 결과, 안전 정책(81.5점) > 노후 지원 정책(74.3점) > 주택시장 대책(73.1점) > 보육부담 완화 정책(69.6점) > 일자리 정책(67.3점) > 교육 정책(66.6점) > 가계부채 대책(56.1점)의 순이었음

■ 2014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은 ‘가계부채 증가’

○ 국민들은 내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‘가계부채 증가’를 꼽았으며, 다음으로는 ‘소비 부진’과 ‘일자리 창출 부진’이었음

- 국민들은 내년도 한국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‘가계부채 증가’를 꼽았으며, 다음으로 ‘소비 부진 등 경기침체 지속’, ‘일자리 창출 부진’, ‘체감물가 불안’, ‘주택시장 불안’, ‘남북관계 불안’ 등의 순으로 응답

■ 2014년 경기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'일자리 창출'

○ 국민들은 내년 우리 경제의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'일자리 창출'을 꼽았음

- 국민들은 내년도 경기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로서 '일자리 창출'을 꼽았으며, 다음으로 '채감물가 안정', '주택시장 안정', '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', '저금리 기조 지속', '정부지출 확대' 등의 순으로 응답

■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'노후 준비'

○ 국민들은 '노후'를 가장 걱정하고 있으며, 그 다음으로는 교육, 일자리, 범죄, 주택, 부채, 보육의 순이었음

- 국민들의 걱정거리 순서는 '노후' 25.1%, '교육' 16.9%, '일자리' 16.6%, '범죄' 13.8%, '주택' 10.2%, '부채(빚)' 9.8%, '영유아 보육' 7.6%의 순이었으며, 연령별로 보면 걱정거리의 순위는 많이 달랐음
 - 20대는 일자리(34.5%)와 교육(18.7%), 30대는 영유아 보육(19.0%)과 노후(18.1%), 주택(17.8%), 40대는 노후(33.1%)와 교육(27.4%), 50대 이상은 노후(37.3%)와 범죄(20.8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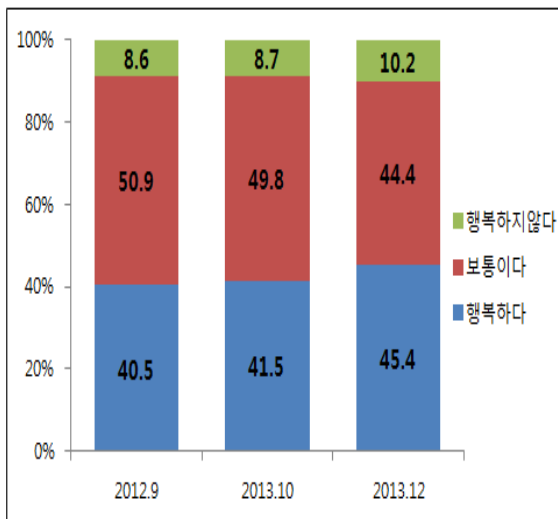
■ 시사점

- 첫째,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많은 자원과 수단이 투입되어야 함
 - 국민행복감 제고를 위한 과제도 '일자리 창출'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, 내년도 경기회복을 위한 과제로서도 '일자리 창출'이 가장 많이 선택됨
 - '양질의 시간제 일자리'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, 특히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고령자, 주부, 여성, 저소득층의 기대에 부응해야 함
- 둘째, 연령별로 서로 다른 환경 하에서 서로 다른 걱정거리를 안고 있으므로, 연령별 맞춤형 정책의 수립이 필요함
 - 20대는 청년 일자리 창출, 30대는 보육비 지원, 40대는 대학생 학자금 부담 완화, 50대는 노후소득 지원 등 연령별로 세분화된 정책이 준비되어야 함
- 셋째, 상대적으로 정책 지지도가 낮은 가계부채 대책과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
 -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임으로써 더 많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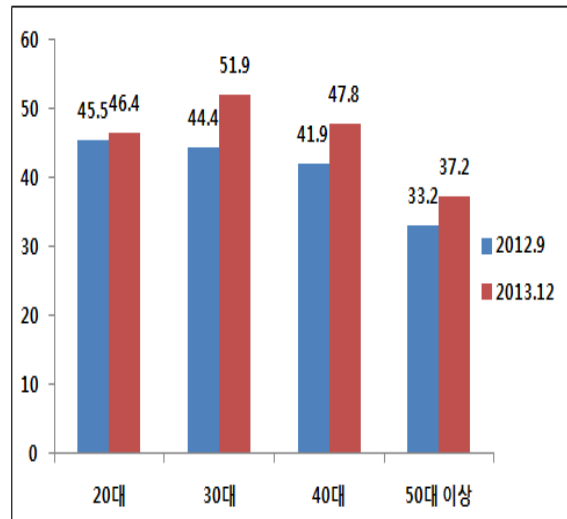
1. 국민행복 계속 증가1)

- (행복감 증가) ‘행복하다’는 응답은 전체의 45.4%로서 1년 전(2012년 9월 말)의 40.5%에 비해 5%p 가량 증가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
 - “귀하는 지금 행복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 ‘행복하다’는 응답이 45.4%로 가장 많았고, 이어서 ‘반반이다’ 44.4%, ‘행복하지 않다’ 10.2%의 순이었으며, 2013년 12월 현재 가장 행복한 집단은 ‘대졸, 30대, 여성, 충청지역, 공무원’
 - ‘행복하다’는 응답은 30대, 여성, 공무원, 고소득일수록 많았으며, ‘행복하지 않다’는 응답은 50대 이상, 남성, 자영업자, 저소득일수록 높게 나타남
 - 연령별로 보면, 30대의 행복감이 51.9%로 가장 높았으며, 50대 이상 고령자의 행복감이 37.2%로 가장 낮았음.
 - 과거(2012년9월, 2013년10월) 조사에서는 20대의 ‘행복하다’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, 이번 조사에서는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남.
 - 20대의 행복감이 소폭 상승한 것에 비해, 30대와 40대, 50대 이상의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하여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됨 (아래 그림 참조)

< 행복감 추이 >



< 연령별 행복감 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.

1) 현대경제연구원은 2013년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 동안 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에 의하여,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,011명의 표본을 추출하여,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, 오차범위는 95% 신뢰수준에서 ± 3.08임.

○ (1년前보다 개선된 행복감) 행복감이 1년前에 비해 어떠신가요? 라는 질문에 55.7%가 '변화 없다'라고 했지만, '좋아졌다'는 28.0%로서 '나빠졌다'는 16.2%보다 크게 높아서, 전체적으로 보면 '행복감'이 1년前보다 개선됨

- '좋아졌다'는 긍정적 응답은 20~40대, 여성, 공무원, 고소득, 고학력, 충청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, '나빠졌다'는 부정적 응답은 50대 이상, 남성, 자영업자, 저소득, 저학력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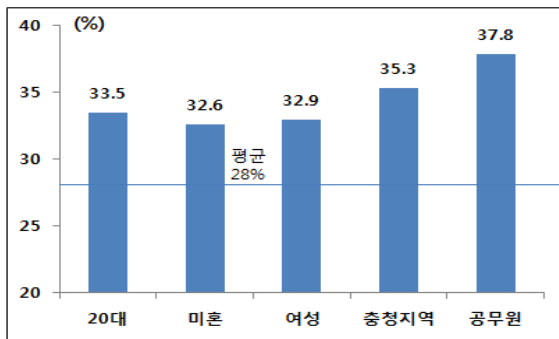
- 연령별로 보면, 20대, 30대, 40대의 경우 '좋아졌다'는 답변이 33%내외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, 50대 이상은 긍정적 답변이 15.6%로 가장 낮았음
- 직업별로 보면, 공무원, 학생들의 '좋아졌다'는 답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, 자영업자는 17.2%로 가장 낮았음

○ (행복감 제고 위한 과제) 국민들의 행복감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할 과제는 '일자리 창출'(28.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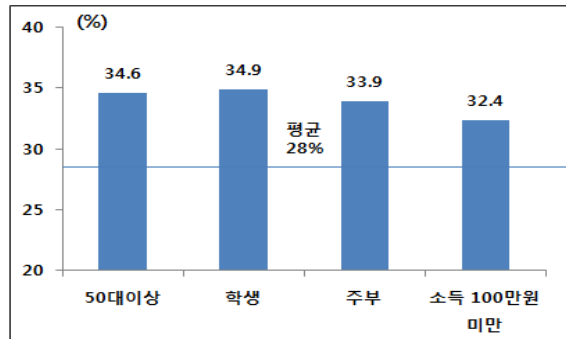
- '일자리 창출'(28.0%)에 이어, '교육비부담 완화'(16.2%), '민생치안 강화'(15.6%), '주택시장 안정'(15.0%), '복지 확충'(13.0%), '경제 민주화'(12.1%) 등의 순

- '일자리 창출'(28.0%)에 대한 요구는 50대 이상(34.6%), 학생(34.9%), 주부(33.9%)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, 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.
- '교육비 부담 완화'(16.2%)는 40대(23.3%)에서 높았고, '민생치안 강화'(15.6%)는 50대 이상(18.5%), 공무원(18.9%), 자영업자(17.4%)에서 높았음
- '주택시장 안정'(15.0%)에 대한 요구는 30대(19.6%)에서 가장 높았고, '복지 확충'(13.0%)에 대한 요구는 20대(17.5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大選 이슈였던 '복지'(13.0%)와 '경제 민주화'(12.1%)는 가장 후순위로 밀림

< '좋아졌다' 응답률 높은 그룹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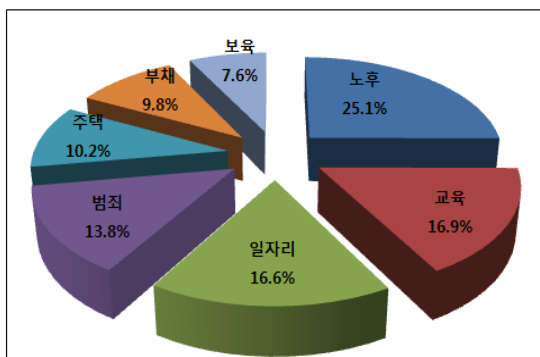
< '일자리 창출' 응답률 높은 그룹 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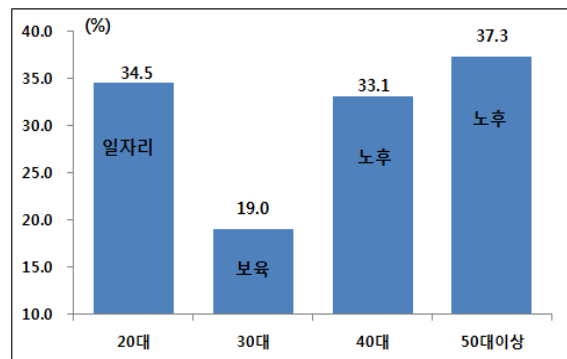
- (‘노후’를 가장 걱정) “다음 7가지 중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인가?”라는 질문에 ‘노후’라는 답변이 25.1%로 가장 많았음
 - “다음 7가지 중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인가요?”라는 질문에 ‘노후’ 25.1%, ‘교육’ 16.9%, ‘일자리’ 16.6%, ‘범죄’ 13.8%, ‘주택’ 10.2%, ‘부채(빚)’ 9.8%, ‘영유아 보육’ 7.6%의 순이었으며, 연령별로 보면 걱정거리는 많이 달랐음
 - 20대는 일자리(34.5%), 교육(18.7%), 30대는 영유아 보육(19.0%), 노후(18.1%), 주택(17.8%), 40대는 노후(33.1%), 교육(27.4%), 50대 이상은 노후(37.3%), 범죄(20.8%)
 - 30대는 걱정거리가 하나로 집중되지 않고, 보육, 노후, 주택 등으로 분산됨
 - 7가지 걱정거리별로 다수 응답자의 특성이 달랐는데, 예를 들면 ‘일자리’는 20대와 학생, ‘부채’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의 응답률이 높음
 - ‘노후’(25.1%)의 응답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고, ‘자영업자’(35.2%)와 ‘주부’(33.2%)가 높았음
 - ‘교육’(16.9%)의 응답률은 40대가 27.4%로 가장 높았으며, 직업별로 보면 학생의 경우 25.3%로 가장 높았는데 본인 학자금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
 - ‘일자리’(16.6%)의 응답률은 20대(34.5%)와 학생(47.6%)이 월등히 높았는데, 그만큼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움을 반영함
 - ‘범죄’(13.8%)는 50대 이상(20.8%)과 주부(18.5%)에서 응답률이 높았고, ‘주택’(10.2%)은 30대(17.8%)에서 응답률이 높았음
 - ‘부채’(9.8%)의 응답률은 자영업자(16.4%)가 특별히 높았으며, ‘영유아 보육’(7.6%)은 특히 30대(19.0%)가 응답률이 높았음

< 7가지 중 가장 큰 걱정거리 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.

< 연령별 가장 큰 걱정거리 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.

주: 30대는 보육(19.0%), 노후(18.1%), 주택(17.8%)으로 분산

2. 7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도

① (일자리 정책)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에 대해 ‘찬성한다’라는 답변은 52.2%로 과반을 넘김

-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물어본 결과, ‘찬성한다’ 52.2%, ‘반반이다’ 30.1%, ‘반대한다’ 17.7%로서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비교적 높은 편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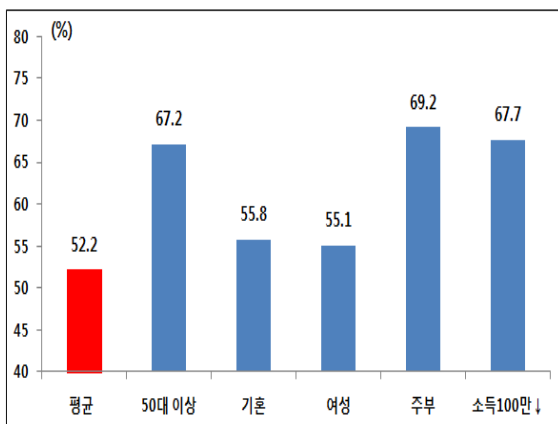
·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대한 ‘찬성’(52.2%)은 여성(55.1%), 50대 이상(67.2%), 주부(69.2%),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(67.7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 즉, 50대 이상 고령층, 여성, 주부, 저소득층 등 상대적 취약계층에서 ‘양질의 시간제 일자리’ 정책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음

② (주택시장 대책)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대해 ‘찬성한다’라는 답변은 58.2%로 상당히 높은 지지를 얻고 있음

-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대한 지지도를 물어본 결과, ‘찬성한다’ 58.2%, ‘반반이다’ 29.8%, ‘반대한다’ 12.1%로서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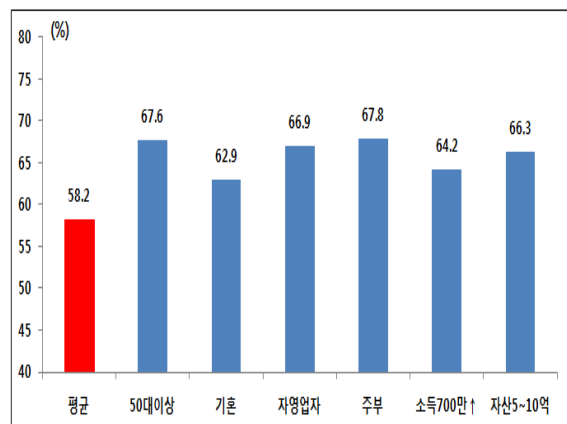
·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대한 ‘찬성’(58.2%)은 50대 이상(67.6%), 주부(67.8%)와 자영업자(66.9%), 자산 5억원 이상의 상대적 부유층에서 높았음.

< ‘일자리 정책’ 찬성률 높은 그룹 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.

< ‘주택정책’ 찬성률 높은 그룹 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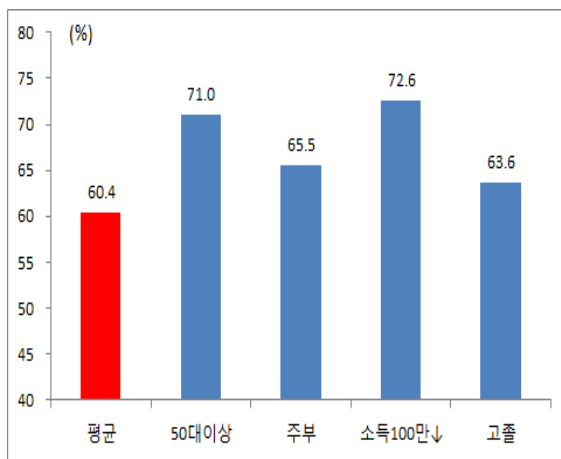
③ (노후 지원 정책) 기초연금 확대, 노인 일자리 등 노후소득 지원을 위한 정책에 대해 '찬성한다'라는 답변은 60.4%로 매우 높은 지지를 얻고 있음

- 기초연금 확대, 노인 일자리 등 노후소득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, '찬성한다' 60.4%, '반반이다' 27.7%, '반대한다' 11.9%로서 지지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
 - 노후소득 지원 정책에 대한 '찬성'(60.4%)은 50대 이상(71.0%)에서 압도적으로 높으며, 직업별로는 주부(65.5%)의 경우, 소득은 낮을수록, 자산이 적을수록 지지도가 높게 나타남.

④ (가계부채 대책) 국민행복기금 신설 등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'찬성한다'라는 답변은 37.6%로 상당히 낮은 편인데, 정책의 수혜자가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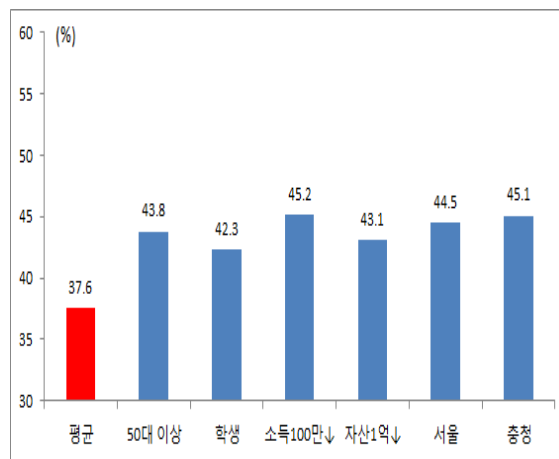
- 국민행복기금 신설 등 가계부채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'찬성한다' 37.6%, '반반이다' 36.9%, '반대한다' 25.5%로서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편임
 -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'찬성'(37.6%)은 50대 이상(43.8%)과 20대(38.2)에서, 학생(42.3%)과 자영업자(38.6%)에서 상대적으로 높고,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
 -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'반대'(25.5%)는 40대(29.0%)와 공무원(31.7%)에서 높으며,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반대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

< '노후소득 정책' 찬성률 높은 그룹 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.

< '가계부채 대책' 찬성률 높은 그룹 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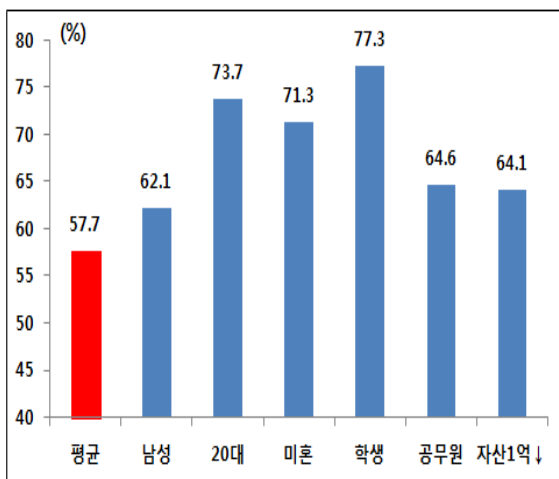
⑤ (보육부담 완화 정책) 0~6세 자녀의 보육비 지원 등 보육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 '찬성한다'라는 답변은 57.7%로 상당히 높은 지지를 얻고 있음

- 0~6세 자녀의 보육비 지원 등 보육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'찬성한다' 57.7%, '반반이다' 23.7%, '반대한다' 18.6%로서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
- 보육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'찬성'(57.7%)은 20대(73.7%)와 30대(69.1%)의 젊은 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으며, 직업별로는 학생(77.3%), 공무원(64.6%), 직장인(59.7%)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 그리고, 소득은 낮을수록, 자산은 적을수록 지지도가 높게 나타남.

⑥ (공교육 활성화 정책)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 공교육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'찬성한다'라는 답변은 48.7%로서 과반에 못 미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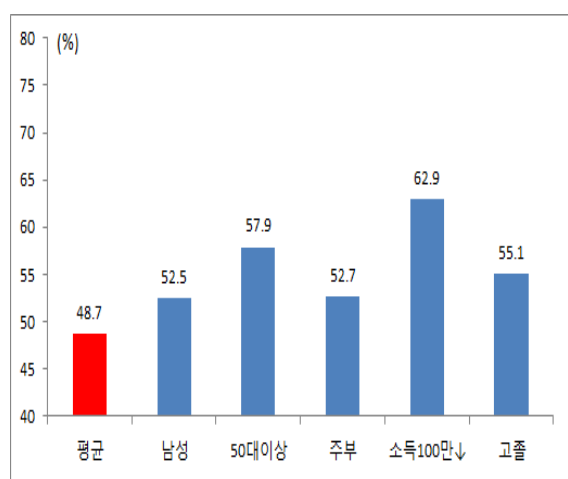
- 자유학기제 신설, 대입 제도 개선 등 공교육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'찬성한다' 48.7%, '반반이다' 35.7%, '반대한다' 15.6%로서 지지도가 낮은 편임
-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'찬성'(48.7%)은 50대 이상(57.9%)과 40대(51.8%)에서 높으며, 직업별로는 주부(52.7%)의 경우 비교적 높음.
-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'반대'(15.6%)는 30대(19.7%)와 20대(18.5%)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, 소득이 높을수록, 자산이 많을수록, 학력이 높을수록 '공교육 활성화 정책'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

< '보육 정책' 찬성률 높은 그룹 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.

< '교육 정책' 찬성률 높은 그룹 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.

⑦ (안전 정책) 생활안전지도 작성, 범죄감축목표제 등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한 정책에 '찬성한다'라는 답변은 68.6%로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음

-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한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물어본 결과, '찬성한다' 68.6%, '반반이다' 25.7%, '반대한다' 5.6%로서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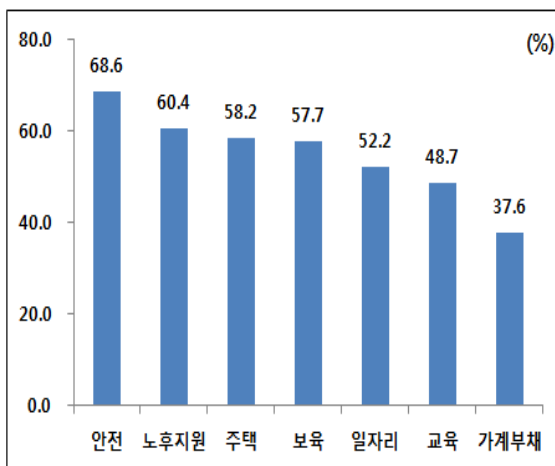
·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한 정책에 대한 '찬성'(68.6%)은 50대 이상(78.9%)에서 압도적으로 높으며, 직업별로는 주부(77.2%)와 자영업자(72.4%)의 경우에, 소득은 낮을수록, 자산이 적을수록 지지도가 높게 나타남.

○ (종합 평가) 7가지 정책에 대한 '찬성한다' 비율은 '안전 정책' 68.6%, '노후지원 정책' 60.4%, '주택시장 대책' 58.2%, '보육부담 완화 정책' 57.7%, '일자리 정책' 52.2%, '공교육 활성화 정책' 48.7%, '가계부채 대책' 37.6%의 순

- 7가지 정책의 '지지도'를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하면, 안전 정책(81.5점) > 노후지원 정책(74.3점) > 주택시장 대책(73.1점) > 보육부담 완화 정책(69.6점) > 일자리 정책(67.3점) > 교육 정책(66.6점) > 가계부채 대책(56.1점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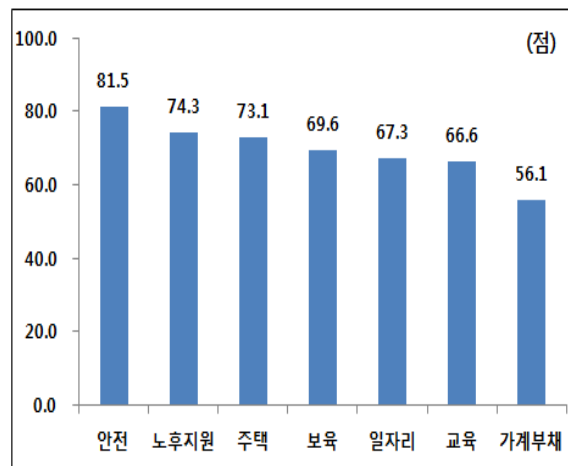
· 가계부채 대책과 교육 관련 정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'찬성한다' 응답률과 지지도 점수가 낮은 편으로서, 국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

< 7가지 정책 '찬성한다' 응답률 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.

< 7가지 정책 '지지도' 점수 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.

주: 찬성한다=100점, 반반이다=50점, 반대한다=0점을 부여한 후 '지지도' 지수화.

3. 내년도 경제 불안 요인 및 경제 활성화 과제

○ (경제 불안요인) 내년도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'가계부채 증가'(19.8%)

- 내년도 한국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은 '가계부채 증가'(19.8%), '소비 부진 등 경기침체'(18.5%), '일자리 창출 부진'(18.4%), '체감물가 불안'(18.1%), '주택 시장 불안'(12.8%), '남북관계 불안'(12.3%)의 순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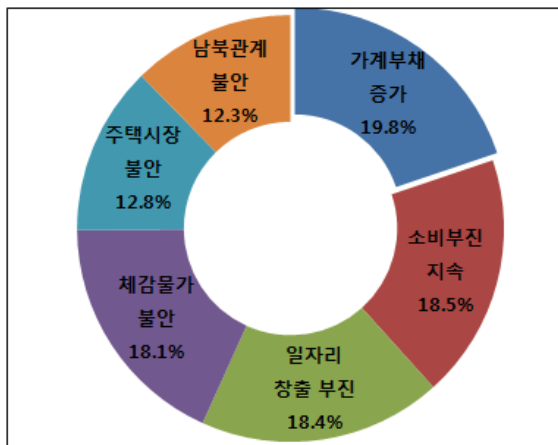
· 20대는 '체감물가 불안'(22.9%)과 '일자리 창출 부진'(22.2%)을, 30대는 '가계부채 증가'(24.9%)와 '체감물가 불안'(20.0%)을, 40대는 '소비부진 등 경기침체'(23.6%)와 '가계부채 증가'(23.2%)를, 50대 이상은 '남북관계 불안'(19.7%)과 '일자리 창출 부진'(19.0%)을 가장 걱정하고 있음

○ (경기회복 과제) 내년도에 가장 필요한 조치는 '일자리 창출'(29.5%)

- 내년도 경기회복,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는 '일자리 창출'(29.5%), '체감물가 안정'(27.3%), '주택시장 안정'(15.8%), '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'(11.8%), '저금리 기조 지속'(9.0%), '정부지출 확대'(6.7%)의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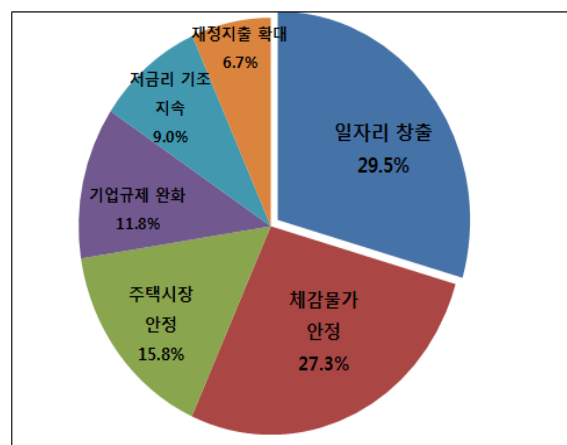
· 20대는 '체감물가 안정'(30.1%)과 '일자리 창출'(29.9%)을, 30대도 '체감물가 안정'(30.8%)과 '일자리 창출'(25.2%)을, 40대는 '일자리 창출'(31.5%)과 '체감물가 안정'(24.0%)을, 50대 이상도 '일자리 창출'(30.9%)과 '체감물가 안정'(25.1%)을 주문하고 있음

< 내년 경제의 불안요인 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.

< 내년 경제의 최우선 정책 과제 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.

4. 시사점

- 첫째,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많은 자원과 수단이 투입되어야 함
 - 국민행복감 제고를 위한 과제도 '일자리 창출'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, 내년도 경기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도 '일자리 창출'이 가장 많이 선택됨
 - '양질의 시간제 일자리'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, 특히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고령자, 주부, 여성, 저소득층의 기대에 부응해야 함

- 둘째, 연령별로 서로 다른 환경 하에서 서로 다른 걱정거리를 안고 있으므로, 연령별 맞춤형 정책의 수립이 필요함
 - 20대는 청년 일자리 창출, 30대는 보육비 지원, 40대는 대학 학자금 부담 완화, 50대는 노후소득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연령별로 세분화된 정책이 준비되어야 함

- 셋째, 상대적으로 정책 지지도가 낮은 가계부채 대책과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
 - 가계부채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과 공교육 활성화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임

경제연구본부 기업정책연구실장 김동열 (02-2072-6213, dykim@hri.co.kr)

<참고 1> 조사 개요

○ 개요

- 조사 기간 : 2013년 12월 9일 ~ 12월 15일 (7일간)
- 조사 방식 : 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에 의하여 전화설문을 통해 전국 1,011개 샘플을 수집
- 오차 범위 : 95% 신뢰수준에서 ± 3.08
- 조사 대상 :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

○ 응답자 특성

구분	성별		연령별				소득수준별				
	남	여	20대	30대	40대	50대~	100만 미만	100~300만	300~500만	500~700만	700만 이상
명	514	497	233	233	255	290	62	372	381	129	53
%	50.8	49.2	23.0	23.0	25.2	28.7	6.2	37.3	38.2	12.9	5.3

구분	직업별							학력별				결혼유무		
	직장인	지역업	전문직	공무원	주부	학생	무직/기타	중졸	고졸	대졸	대학원 이상	기혼	미혼	기타
명	474	145	8	82	146	97	57	61	198	682	67	663	325	23
%	47.0	14.4	0.8	8.1	14.5	9.6	5.6	6.1	19.6	67.7	6.6	65.6	32.1	2.3

구분	지역별								자산규모별				
	서울	인천 경기	대전 충청	광주 전라	제주	부산 울산·경남	대구 경북	강원	1억 미만	1억~5억	5억~10억	10억~20억	20억 이상
명	209	280	102	109	11	163	106	31	304	517	104	43	13
%	20.7	27.7	10.1	10.8	1.1	16.1	10.5	3.1	31.0	52.7	10.6	4.4	1.3